

2018년 소방간부후보생 - 행정학

해설 : 이승철

01 전통적인 관료제와 비교해 애드호크라시(adhocracy)의 상대적인 특성이 아닌 것은?

2018 소방간부

- ① 권한은 구성원이 지닌 직위보다 각자가 보유한 전문성으로부터 나온다.
- ② 수평적 분화와 분권화가 강한 반면, 수직적 분화와 공식성은 약한 편이다.
- ③ 문제해결을 위한 한시적 조직으로 목표가 달성되면 해체되는 경우가 많다.
- ④ 전문인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업무의 이질성이 높은 편이다.
- ⑤ 현장 중심의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행정 지원부서의 규모가 큰 편이다.

해설

- ① (○) 관료제는 권한이 직위에 부여되지만 adhocracy 문제해결능력을 가진 자가 권한을 갖는다. .. 계서적 권한·지위가 아니라 임무와 전문적 능력을 중시한다.
- ② (○) 수직적 분화의 수준은 낮아지나(탈계층제), 수평적 분화의 수준은 높아진다(즉, 전문성을 기초로 한 문제중심적 조직의 성격을 지닌다.). 단, 관료제와 달리 수평적 분화의 기준은 기능의 동질성이 아니라, 일의 흐름에 관련된 상호관련성이다. 전체적인 일의 흐름 속에서 상호 관련된 활동들을 한데 묶어 통합적인 구조적 단위들을 형성한다. 또한, 환경변화에 신속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규칙화, 표준화, 공식화 정도가 낮고 상황적응적이다.
- ③④ (○) 문제해결이나 효과적인 혁신을 위하여 서로 다른 전문분야의 전문가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킨 이질적 집단으로 구성되며, 변화가 심하고 적응력이 강한 임시적인 체제(system)이다. 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형식주의나 공식성에 얽매이지 않으며 의사결정권이 분산된 특성을 갖는다.
- ⑤ (×) 현장에서 문제해결 중심으로 일을 하므로 행정지원계층의 규모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adhocracy는 수직적 분화 정도가 낮으므로(탈계층제 구조)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가 적어 행정지원계층의 규모가 작다.

답 ⑤

02 우리나라의 시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소방간부

- ① 시보임용은 면제될 수 있다.
- ② 시보공무원은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 ③ 감봉처분 기간은 시보기간에 산입된다.
- ④ 시보기간은 공무원 경력에 포함된다.
- ⑤ 시보제도는 선발절차·도구의 하나이다.

해설

- ① (○)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② (○)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 ③ (×) 휴직할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계산하지 않음.
- ④ (○) 시보기간은 승진소요연수 및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산입이 된다.
- ⑤ (○) 시보제도는 다른 선발도구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만 실제 부서에서 적격여부를 검증할 수 있으므로 선발의 타당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 국가공무원법 제29조(시보 임용)

-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급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② 휴직할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③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8조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 공무원임용령 제25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 ① 제24조에 따라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임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 1.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2조의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승진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 2. 정규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 3. 수습직원이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 4.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답 ③

03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소방간부

- ① 동일직무에 대해서 동일보수를 지급하는 직무급 체계의 확립에 기여한다.
- ② 공무원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중시하는 직업공무원제 수립에 기여한다.

- ③ 직무의 내용, 성격, 자격요건 등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진다.
- ④ 직무의 내용이나 수준을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직위 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다.
- ⑤ 동일 직렬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 한다.

해설

② (x) 특정 직위의 직무수행능력에 관한 인물의 적합성을 강조하므로, 공무원의 장기적 발전가능성이나 잠재력을 중시하는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이 곤란하다.

답 ②

04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소방간부

- ①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는 국가별 다양한 행정이나 정책의 특성을 제도적 차이로 설명한다.
- ② 체제론(System Theory)은 행정현상의 급진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 ③ 행태론(Behavioralism)은 인간 행태에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④ 행태론이 객관주의적 접근방법이라면 현상학(Phenomenology)은 주관주의적 접근방법에 해당한다.
- ⑤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은 사회 현실의 객관성에 기반한 행정의 보편적 법칙성을 강조한다.

해설

① (○) 신제도주의는 제도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에 따라 정책의 내용과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설명한다. 역사적 신제도주의에 따르면 정책을 개인선호의 합이나 혹은 행위자들의 갈등과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지 않으며, 정책결정과 그 결과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의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동일한 정책이라도 국가별 역사적 특수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그 역사적 특수성이 제도의 본질이며, 제도를 국가별 특성을 결정짓는 독립변수로 파악했다.

② (○) 체제론은 동태적 변화를 설명하기 곤란하며, 정태적·균형적 성격을 띠게 되어 정치적·사회적 변동·발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③ (○) 행태론은 인간 행태의 규칙성·상관성·인과성을 경험적·계량적으로 검증하고 일반화하여 과학적 이론을 정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 행태론은 실재론(實在論; realism)에 의한 객관주의·외면주의. 현상학은 유명론·명목론(唯名論·名目論; nominalism)에 의한 주관주의·내면주의.

⑤ (x) 포스트모더니즘은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절대주의에 회의(懷疑)를 갖고 진리의 기준은 맥락의존적(context dependent; 상대적)이라고 보며 거시이론·거대설화[메타설화]·거시정치 등(보편주의·근원주의)을 부인하고 다양성·상대성을 중시하였다.

답 ⑤

05 공공선택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소방간부

- ① 정부는 '공유재의 비극'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재를 생산·공급함에 있어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
- ② 정부의 권위적이고 독점적인 공공재의 생산·공급은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 ③ 정부와 시민을 각각 공급자와 소비자로 간주하고, 행정 및 정치를 이들 간에 이루어지는 재화의 거래를 위한 장치로 이해한다.
- ④ 정부실패의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신공공관리론(NPM)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 ⑤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경제인을 가정하는 합리적 선택이론을 공공부문에 적용한다.

해설

① (x) 공공선택론의 핵심적 가치기준은 행정서비스에 관한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다. 여기에 수반되는 가치전제는 경쟁을 통한 행정의 대응성 제고 및 공공배분결정의 합리성 제고이다. 공공선택론은 정책결정구조가 채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방식을 평가하여 시민들의 선호를 가장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려 한다. 공공선택론은 시민의 이익(복지)을 항상 시킬 가능한 최적의 자원배분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의 합리화를 처방한다. 가능한 최적의 자원배분결정이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그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도록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으로서 '파레토 최적'의 정책결정을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공공선택론의 합리화처방은 순수경제이론에 입각한 것이 아니며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는 정치적 요인을 중요시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에 입각한 것이다.

② (○) Ostrom이 행정학의 지적위기(intellectual crisis)를 내세우면서 민주행정을 위한 공공선택 패러다임을 주장하였다. 그는 전문적 능력을 가진 관료제가 상하관계 중심의 계층제 구조를 통하여 국가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윌슨적 행정관(Wilsonian perspective)을 비판하면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전통적 관료제로서는 시민·고객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③ (○) 공공선택론에서는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라고 규정한다. 시민들은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규정하고 행정 내지 정치를 이들 간에 재화가 거래되는 장치로 이해한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소비자인 시민 개개인의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비전통적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비전통적 대안의 요체는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이다. 공공선택론은 전통적 정부관료제를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공공재 공급장치를 처방한다.

④ (○) 공공부문에서는 사유재가 가격기제에 의해 자유롭게 교환되고 분배되는 민간부문의 시장과 달리 정부가 권위적이고 독점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여 왔다. 공공선택론은 시장 실패에 따른 정부개입을 당연시 하던 이러한 견해를 반대하고 오히려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공공선택론은 이러한 공공부문에 경제학의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재화의 공급과 분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관심을 갖는다.

⑤ (○) 공공선택론에서는 정당, 지방정부, 국가 등을 분석의 기초단위로 채택하지 않고 대표적이라고 생각되는 개인의 입장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공공선택론은 분석의 기초단위인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이기적 또는 자기 이익추구적이며, 합리적이고 효용의 극대화 전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가정한다. 자기이익추구적인 행동법칙이 민간부문에서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적용된다고 본다.

답 ①

06 정치·행정이원론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소방간부

- ① 행정을 정치중립적이며 비권력적인 관리현상으로 이해한다.

- ② 미국의 펜들턴법(Pendleton Civil Service Reform Act)과 맥락을 같이한다.
- ③ 과학적 관리법에 기반한 행태주의적 관점을 견지한다.
- ④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 개혁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였다.
- ⑤ 행정학이 독립된 학문분야로 등장하였다.

해설

①④ (○) 정치·행정2원론인 행정관리론과 관련된다.

■ 윌슨(W. Wilson)의 행정관

윌슨은 행정의 본질을 정책결정[의사결정]이 아닌 정책집행으로 보았다.

┌ 정치는 '목표의 영역' → 책임성·민주성·대표성·선거와 관련됨.

└ 행정은 '수단의 영역' → 전문성(specialism)·기술성·능률성·계속성·성과 등과 관련됨.

정치(의회)	정책결정, 국가의사의 결정	법 제정·정립	가치판단, 목표	권력현상	민주성·대응성·책임성 중시
행정	정책집행, 국가의사의 집행	법의 구체화·실현	사실판단, 수단	관리현상	능률성·전문성·기술성 중시

■ 진보주의 개혁운동(progressive movement) : 1789년 건국 후 미국 정치체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을 상징하는 제퍼슨-잭슨철학이 지배했다. '최소의 행정이 최선의 정부'라는 작은 정부 철학이 있었고 아마추어리즘과 공격순환이 행정을 지배해 왔다. 1829년 잭슨(A. Jackson)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선거전에서 승리한 정당이 관직을 차지하는 엽관주의가 도입되었다. 엽관주의는 건국 이후 미국 행정부 내에 누적된 특정 지역 및 계층 중심의 관료 파벌을 해체하는 유용한 혁신 수단이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급속한 산업화화 함께 정부 역할이 확대되고 업무가 복잡해지면서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정당인들을 공직에 채용하는 엽관제는 행정의 비효율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전문성과는 관계없이 정당에 대한 충성을 기준으로 공직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부패가 초래되었다. 이에 따라 엽관제로 인한 비효율과 부패를 혁신하기 위한 공직개혁으로서 진보주의 운동이 전개되었다. 진보주의 개혁운동가들은 정치와 행정을 분리해 정치적으로는 시민 참여 기회를 더 많이 보장하도록 개혁하고 행정은 능률성 위주의 업무 전문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따라 펜들턴 법이 제정되고 정치적 중립과 실적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했으며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험제도를 통해 공무원을 채용하였다.

- ② (○) 팬들턴법은 미국 공무원인사제도를 엽관주의에서 실적주의로 전환시킨 법률로 공채시험, 정치적 중립 등을 규정하여 행정에 대한 정치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을 제한하는 내용을 지니므로 정치·행정2원론적 시각이었다.
- ③ (×) 과학적 관리론이나 행태주의는 정치·행정2원론적 시각이다. 그러나 행태주의가 과학적 관리법에 기반을 두는 것은 아니다. 행태주의는 과학적관리론의 기계적 인간관을 비판하면서, 인간관계론의 인간관계적 측면을 발전시키고, 의사결정과정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행태를 중심으로 행정의 본질을 규명하였다.

답 ③

07 준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소방간부

- ①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②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③ 국회의 사전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④ 우리나라는 정부수립과 함께 준예산제도를 계속 채택해오고 있다.
- ⑤ 예산 불성립에 따른 임시예산이다.

해설

①②③⑤ (○) ·헌법 제54조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④ (×) 제1공화국 때(1948~1960) 때는 가예산제도를 채택하였다. 준예산제도는 제2공화국 때(1960)부터 채택하고 있다.

■ 예산 불성립시 예산제도(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때 활용되는 예산제도)

종 류	사용기간	의회 의결	지출항목	채택국가	우리나라
준예산	제한 없음	불필요	한정적	독일, 우리나라	2 공화국 때부터(1960~) 채택, 국가예산에 사용된 적은 없음.
가예산	최초 1개월	필요	전반적	프랑스 3·4공화국	1 공화국 때(1948~1960) 채택, 사용된 적 있음
잠정예산	제한 없음(주로 의회 의결시 정함)	필요	전반적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채택한 적 없음

답 ④

08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정통제체제에 속하지 않는 것은?

2018 소방간부

- ①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 ② 행정의 잘못에 대하여 제기되는 진정·고발·청원
- ③ 국회에서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의결·임명하는 옴부즈맨(Ombudsman)
- ④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행하는 헌법재판소
- ⑤ 명령·규칙에 대한 심사권을 행사하는 법원

해설

③ (×) 국회에서 의결·임명하는 옴부즈맨은 우리나라 현행 제도에서 인정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국무총리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고충민원처리제도가 옴부즈맨과 유사한 제도이다.

답 ③

09 우리나라의 자치입법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소방간부

- 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자치법규는 주민에 대하여 벌칙을 정할 수 없다.
- ③ 자치입법권에 입각한 자치법규로는 조례, 규칙, 교육규칙 등이 있다.
- ④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 된다.
- ⑤ 규칙의 제정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해설

② (×)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조례로 벌칙을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조례와 규칙

자치입법	조례	규칙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규범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범
제정권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교육·학예 규칙)
사무범위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제정 가능. 기관위임사무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집행기관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없음이 원칙.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제정 가능. 단 지방의회의 전속적 권한인 사항은 제정 불가.
제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 가능(법령의 위임이 없어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로 해석) ⇒ 위임조례와 직권조례 • 예외 :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 필요(포괄적 위임도 가능) 예) 지방자치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과태료는 해당 자치단체장이나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단체장이 부과·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제정(개별·구체적 위임 필요) ⇒ 법령위임규칙과 조례위임규칙 •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는 법령·조례의 개별·구체적 위임 필요 • 규칙에는 과태료 부과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없음.

답 ②

10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소방간부

- ① 우리나라는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소송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② 주민은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지방의회에 발의 또는 청구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長) 및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이 된다.
- ④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 ⑤ 주민은 지방예산의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해설

② (×) 주민은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해야 한다. 지방의회에 주민의 직접 발의·청구하는 것은 현 정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들어있지만 아직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답 ②

11 대표관료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소방간부

- ① 여차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②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적극적으로 보장 하는 데 의의가 있다.
- ③ 출신집단의 가치와 이익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공무원 간의 견제와 내적 통제가 강화된다.
- ④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강화한다.
- ⑤ 관료들의 국민에 대한 대표성을 높이고 민주적 서비스를 촉진한다.

해설

④ (×) 사회집단의 인구구성비율을 반영하여 임용하므로 전문적 능력이 미흡한 인사가 공직에 임용될 경우 전문성·생산성을 저해한다.

대표관료제의 특징 구별

대표관료제의 특징인 것	대표관료제의 특징이 아닌 것
대표성·대응성·책임성·민주성	전문성·능률성·생산성, 대내적 민주성 확보
사회적 형평성, 실질적 기회균등, 결과의 평등	정치적 중립성 윤리와의 조화, 형식적 기회균등, 기회의 평등
수직적 평등의 확보, 수평적 평등의 저해(역차별) 우려	수평적 평등의 확보, 수직적 평등의 저해, 역차별 방지
내부통제, 비공식적 통제의 방법, 민중통제(외부통제)의 내재화	외부통제, 공식통제의 방법
사회집단의 인구구성비율 반영	공개경쟁채용시험, 선거를 통한 임용, 실적과 능력 중시
실적주의의 폐단 시정, 실적주의와 충돌 가능 적극적 인사행정, 정치적 임용 가능	업관주의의 폐단 시정, 실적주의의 강화, 실적주의와 양립 불가 정치적 임용 배제, 정당정치 발전에 기여
집단 중심의 사고	개인주의·자유주의의 강화, 국민주권원리, 거버넌스적 시각
충원 후 사회화(재사회화·2차 사회화)를 고려 못함	충원 후 사회화(재사회화·2차 사회화)의 고려

답 ④

12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가 아닌 것은?

2018 소방간부

- ① 종교 중립의 의무
- ② 선물 신고의 의무
- ③ 비밀 엄수의 의무
- ④ 복종의 의무
- ⑤ 품위 유지의 의무

해설

② (×) 선물신고의 의무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

공직윤리의 체계

법적 타율적 구분	헌법	공무원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7조 1항). * 충성의 의무를 헌법상 의무(헌법에 규정된 의무 ×)로 분류하기도 함
법적 타율적 구분	국가공무원법	① 성실의무, ② 복종의무, ③ 친절공정업무, ④ 비밀엄수의무, ⑤ 청렴의무, ⑥ 품위유지의무, ⑦ 종교중립 의무, ⑧ 선서의무, ⑨ 외국정부의 영예 등 규제, ⑩ 작장이탈 금지, ⑪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⑫ 정치운동 금지, ⑬ 집단행위 금지 * 징계 및 징계부가금
	공직자윤리법	① 이해충돌방지업무, ② 재산등록 및 공개, ③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인도, ④ 퇴직공직자 취업제한(3년) 및 행위제한, ⑤ 주식 매각 및 배지신탁 *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① 부패행위신고(내부고발)의무 및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②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5년), ③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④ 공직자의 청렴의무 * 국민감사청구, 부패유발 요인 검토, 공무원행동강령의 근거, 검찰에의 고발과 재정신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① 공정·청렴한 직무수행, ② 직무수행 관련 공평무사한 처신 및 직무관련자 우대·차별 금지, ③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와 부정청탁의 신고, ④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수수금지품등의 신고, ⑤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⑥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기타 개별법	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고위공직자의 병역사항 신고·공개) ②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공무원범죄를 통한 불법수익 추적·환수) ③ 공직선거법(선거범죄자 임용제한)
행정적 자율적 구분	추상적 규범	공무원헌장(2016. 대통령령). 기존 공무원윤리헌장을 대체
	구체적 규범	공무원행동강령(2005. 대통령령)

답 ②

13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소방간부

- ① 합리모형(Rational Model)은 정책결정에서 인간의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정치적 현실의 역동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 ②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은 제한된 합리성을 중시하며 정책결정자의 주관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에 근거한다.
- ③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에 따르면 정책은 이해관계자들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이다.
- ④ 최적모형(Optimal Model)은 합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모형으로서 체제론적 입장을 배격한다.
- ⑤ 혼합주사모형(Mixed-Scanning Model)은 정책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한다.

해설

① (○) 합리모형은 경제적 합리성, 양적 분석을 강조하므로 주관적 질적 요소나, 정치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④ (×) 최적모형은 정책결정과정을 체제론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정책결정체제의 산출이 투입보다 크도록 정책성공을 최적화하기 위해 경제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직관, 창의성, 판단력, 예견력, 영감, 예측, 추측, 암시 등의 초합리적 요소까지도 고려하는 이론모형이다. 최적화가 가능하려면 미시적으로 정책결정만 볼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체제가 전체적으로 잘 설계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정책결정체제를 모형 속에 포함시킨다.

답 ④

14 비교행정론의 태동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소방간부

- ① 공공행정의 과학화를 위한 노력
- ② 비교행정연구회(CAG)의 활동
- ③ 다양한 문화와 국가에 적용 가능한 행정이론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
- ④ 행정학의 처방적 역할에 대한 요구
- ⑤ 신생국 원조사업에 대한 학자들의 참여

해설

④ (×) 비교행정론은 일반법칙적 연구, 행정학의 과학화 노력 등과 관련되므로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행정학의 기술성(art)·처방성 보다는 행정현상을 설명하는 과학성(science)을 강조한다.

■ 비교행정론의 배경

- ① 행정학의 과학화 노력과 전통적 방법론에 대한 비판(보편성의 결여) : 전통적 행정학이 지닌 미국 중심의 대내적·주관적 행정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 국가가 처한 사회 문화적 환경을 중심으로 구조기능적 접근이나 문화형단적 접근을 통해 각국의 행정을 연구. 문화화 환경이 서로 다른 여러 나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법칙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이론 개발을 위해 각국의 행정현상을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연구.
- ② 비교정치론의 영향 : 정치학에 있어서 신생국의 정치발전에 관한 연구는 비교행정연구를 자극.
- ③ 미국의 신생국 원조계획에 대한 평가와 학자들의 참여 :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신생국 원조계획 실패에 대한 반성, 경제·기술원조계획 등에 많은 행정학자들이 참여하여 비교행정에 대한 관심 고조.
- ④ 유럽학자들의 학문적 영향 : 행정학 분야에서 Weber 등의 유럽학자들의 관심이 비교행정의 발전에 기여.
- ⑤ 미국 행정학회 내 포드재단 지원을 받은 비교행정연구회(CAG : Comparative Administration Group)의 활동

답 ④

15 계획예산제도(PPB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소방간부

- ① 의사결정의 집권화보다는 분권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 ② 목표설정은 가치판단적인 것이기 때문에 계량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 ③ 국가목표를 실현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탐색한다.
- ④ 국가목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 ⑤ 예산부서와 예산담당자의 분석적 능력이 요구 된다.

해설

- ① (×) 전문 마크 중심의 운영과 의사결정의 지나친 집권화로 최고관리층의 권한을 강화(대통령에게 권한 집중, 부처 내에서는 국·과보다는 장관에게 권한 집중)시켜 하급공무원 및 계선기관의 참여가 곤란하다.
- ② (○) PPBS는 목표의 설정에서부터 모든 과정을 계량화해야 하나, 실제 행정영역은 추상적 서비스의 제공이 많고 양적 계량화가 불가능한 정치적·윤리적·심리적 요인과 무형적 비용·편익이 존재한다는 한계가 있다.
- ③④ (○) 목표를 가능한 한 수치로 명확히 설정하여, 선택한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산출로 표시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대안을 비교·평가하여 효과성이 높은 대안을 선택한다. 기존의 정치적 합리성에 근거한 점증주의 예산과 달리 정치적 협상·타협은 배제되고 철저한 분석기법의 적용을 통한 합리적 대안선택을 강조하며 예산 자원배분의 준거기준은 경제적 합리성이다. 예산결정은 정책목표 달성이나 문제해결의 기여도에 따라 예산사업의 여러 대안들을 분석·평가하여 선택한다.
- ⑤ (○) 예산부서와 예산담당자의 분석적 능력이 요구되므로 PPBS의 복잡한 분석기법과 편성방법을 공무원이나 의회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답 ①

16 예산집행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소방간부

- ① 예산배정제도 ② 국고채무부담행위 ③ 추가경정예산 ④ 계속비와 예비비 ⑤ 이용과 전용

해설

① (×) 예산배정제도는 재정통제수단으로 본다.

답 ①

✦ 예산집행의 재정통제 수단과 신축성 확보 수단																																																							
1. 재정통제수단 <table border="1"> <tr><td>배정</td><td>기획재정부장관 ⇨ 중앙관서의 장</td></tr> <tr><td>재배정</td><td>중앙관서의 장 ⇨ 산하기관(재무관)</td></tr> <tr><td>지출원인 행위 통제</td><td>법령이나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td></tr> <tr><td>계약에 대한 통제</td><td>법률에 계약 방법·절차 규정. 일정액 이상의 계약은 상급기관의 승인 필요</td></tr> <tr><td>정원·보수 통제</td><td>증원, 보수 인상시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td></tr> <tr><td>장부 기록·보고</td><td>재정집행 관련 장부 기록, 보고서 제출</td></tr> <tr><td>예산집행심의위원회</td><td>예산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가하기 위하여 설치·운영</td></tr> <tr><td>예산사업의 사전검토·협의·조사</td><td>① 예비타당성 조사: 본격적 타당성 조사 이전에 기획재정부에 경제성·정책성을 개략적으로 조사. ② 총사업비의 관리: 사업규모·총사업비·사업기간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③ 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단계별 편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단계별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해당 연도 예산으로 요구.</td></tr> <tr><td>명세예산</td><td>세부적 용도지정으로 국회가 승인하는 예산</td></tr> <tr><td>기타</td><td>예산안편성지침, 보조금의 관리, 재정집행의 관리(매월 경과 후 20일 이내에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대한 감독</td></tr> </table>	배정	기획재정부장관 ⇨ 중앙관서의 장	재배정	중앙관서의 장 ⇨ 산하기관(재무관)	지출원인 행위 통제	법령이나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	계약에 대한 통제	법률에 계약 방법·절차 규정. 일정액 이상의 계약은 상급기관의 승인 필요	정원·보수 통제	증원, 보수 인상시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장부 기록·보고	재정집행 관련 장부 기록, 보고서 제출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예산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가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예산사업의 사전검토·협의·조사	① 예비타당성 조사: 본격적 타당성 조사 이전에 기획재정부에 경제성·정책성을 개략적으로 조사. ② 총사업비의 관리: 사업규모·총사업비·사업기간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③ 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단계별 편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단계별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해당 연도 예산으로 요구.	명세예산	세부적 용도지정으로 국회가 승인하는 예산	기타	예산안편성지침, 보조금의 관리, 재정집행의 관리(매월 경과 후 20일 이내에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대한 감독	2. 신축성 확보 수단 <table border="1"> <tr><td>이 용</td><td>입법과목(장·관·항) 간 이동. 국회의결 필요</td></tr> <tr><td>전 용</td><td>행정과목(세항·목) 간 이동. 국회의결 불필요</td></tr> <tr><td>이 체</td><td>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시 관련예산 이관</td></tr> <tr><td>이 월</td><td>명시이월: 예측 가능 사유, 국회의결 필요, 재이월 가능 사고이월: 예측 불가능 사유, 국회의결 불요, 재이월 불가.</td></tr> <tr><td>계속비</td><td>완성에 수년(5년 내)이 필요한 공사·제조·연구개발사업</td></tr> <tr><td>국고채무부담 행위</td><td>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계속비총액 범위의 것 이외에 채무부담. 채무부담권만 부여.</td></tr> <tr><td>예비비 지출</td><td>예측 못한 예산 외 지출 및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일반회계에 산 총액의 1% 이내.</td></tr> <tr><td>수입대체경비</td><td>초과수입을 직접 관련 경비 및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 가능(국가재정법)</td></tr> <tr><td>수입금마련지출</td><td>초과수입을 직접 관련되는 비용에 사용 가능(정부기업예산법)</td></tr> <tr><td>총액계상사업</td><td>세부사업이 정해지지 않고 총액규모만을 정하여 예산에 반영</td></tr> <tr><td>총괄(총액)예산</td><td>구체적 용도를 지정 없이 큰 항목을 기준으로 의회가 예산을 승인</td></tr> <tr><td>추가경정예산</td><td>예산 성립 후 일정 사유 발생시 추가로 편성된 예산</td></tr> <tr><td>준예산</td><td>예산 불성립시(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 안 됨) 사용</td></tr> <tr><td>긴급재정경제 명령·처분</td><td>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발할. 국회의 사후 승인.</td></tr> <tr><td>신축적 예산배정</td><td>긴급배정(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장에게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당겨배정(해당 분기 도래 전 배정), 조기배정(상반기에 집중 배정), 수시배정(배정계획에 관계없이 배정), 감액배정, 배정유보</td></tr> <tr><td>신성과주의 예산</td><td>자율예산편성(총괄배정예산), 지출통제예산, 운영예산 등</td></tr> <tr><td>기타</td><td>수입 특례, 지출 특례, 재정증권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td></tr> </table>	이 용	입법과목(장·관·항) 간 이동. 국회의결 필요	전 용	행정과목(세항·목) 간 이동. 국회의결 불필요	이 체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시 관련예산 이관	이 월	명시이월: 예측 가능 사유, 국회의결 필요, 재이월 가능 사고이월: 예측 불가능 사유, 국회의결 불요, 재이월 불가.	계속비	완성에 수년(5년 내)이 필요한 공사·제조·연구개발사업	국고채무부담 행위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계속비총액 범위의 것 이외에 채무부담. 채무부담권만 부여.	예비비 지출	예측 못한 예산 외 지출 및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일반회계에 산 총액의 1% 이내.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을 직접 관련 경비 및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 가능(국가재정법)	수입금마련지출	초과수입을 직접 관련되는 비용에 사용 가능(정부기업예산법)	총액계상사업	세부사업이 정해지지 않고 총액규모만을 정하여 예산에 반영	총괄(총액)예산	구체적 용도를 지정 없이 큰 항목을 기준으로 의회가 예산을 승인	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 일정 사유 발생시 추가로 편성된 예산	준예산	예산 불성립시(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 안 됨) 사용	긴급재정경제 명령·처분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발할. 국회의 사후 승인.	신축적 예산배정	긴급배정(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장에게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당겨배정(해당 분기 도래 전 배정), 조기배정(상반기에 집중 배정), 수시배정(배정계획에 관계없이 배정), 감액배정, 배정유보	신성과주의 예산	자율예산편성(총괄배정예산), 지출통제예산, 운영예산 등	기타	수입 특례, 지출 특례, 재정증권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배정	기획재정부장관 ⇨ 중앙관서의 장																																																						
재배정	중앙관서의 장 ⇨ 산하기관(재무관)																																																						
지출원인 행위 통제	법령이나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																																																						
계약에 대한 통제	법률에 계약 방법·절차 규정. 일정액 이상의 계약은 상급기관의 승인 필요																																																						
정원·보수 통제	증원, 보수 인상시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장부 기록·보고	재정집행 관련 장부 기록, 보고서 제출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예산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가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예산사업의 사전검토·협의·조사	① 예비타당성 조사: 본격적 타당성 조사 이전에 기획재정부에 경제성·정책성을 개략적으로 조사. ② 총사업비의 관리: 사업규모·총사업비·사업기간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③ 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단계별 편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단계별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해당 연도 예산으로 요구.																																																						
명세예산	세부적 용도지정으로 국회가 승인하는 예산																																																						
기타	예산안편성지침, 보조금의 관리, 재정집행의 관리(매월 경과 후 20일 이내에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대한 감독																																																						
이 용	입법과목(장·관·항) 간 이동. 국회의결 필요																																																						
전 용	행정과목(세항·목) 간 이동. 국회의결 불필요																																																						
이 체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시 관련예산 이관																																																						
이 월	명시이월: 예측 가능 사유, 국회의결 필요, 재이월 가능 사고이월: 예측 불가능 사유, 국회의결 불요, 재이월 불가.																																																						
계속비	완성에 수년(5년 내)이 필요한 공사·제조·연구개발사업																																																						
국고채무부담 행위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계속비총액 범위의 것 이외에 채무부담. 채무부담권만 부여.																																																						
예비비 지출	예측 못한 예산 외 지출 및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일반회계에 산 총액의 1% 이내.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을 직접 관련 경비 및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 가능(국가재정법)																																																						
수입금마련지출	초과수입을 직접 관련되는 비용에 사용 가능(정부기업예산법)																																																						
총액계상사업	세부사업이 정해지지 않고 총액규모만을 정하여 예산에 반영																																																						
총괄(총액)예산	구체적 용도를 지정 없이 큰 항목을 기준으로 의회가 예산을 승인																																																						
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 일정 사유 발생시 추가로 편성된 예산																																																						
준예산	예산 불성립시(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 안 됨) 사용																																																						
긴급재정경제 명령·처분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발할. 국회의 사후 승인.																																																						
신축적 예산배정	긴급배정(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장에게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당겨배정(해당 분기 도래 전 배정), 조기배정(상반기에 집중 배정), 수시배정(배정계획에 관계없이 배정), 감액배정, 배정유보																																																						
신성과주의 예산	자율예산편성(총괄배정예산), 지출통제예산, 운영예산 등																																																						
기타	수입 특례, 지출 특례, 재정증권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17 공공부문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018 소방간부

- ① 유권자의 요구 ② 집권정당의 성향 ③ 국가 발전의 정도 ④ 정치이념 ⑤ 정부형태

해설

- ① (○) 유권자의 요구, 즉 행정수요의 내용·정도가 정부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② (○) 집권정당의 정책성향에 따라 정부 역할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③ (○) 상대적으로 개도국의 경우 국가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활동이 요구된다.
 ④ (○) 정치이념적 측면에서 보수주의보다는 진보주의, 다원주의 보다는 사회주의에서 정부개입 역할이 더 증대될 수 있다.
 ⑤ (×)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 대통령중심제, 이원집정부제 등 주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구성 및 운영방식에 관한 것으로 공공부문의 규모와 직접적 연관성은 약하다.

답 ⑤

18 「지방자치법」상 사무배분 혹은 행정에 관한 특례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2018 소방간부

- ① 자치구 ② 제주특별자치도 ③ 인구 50만 이상의 시
 ④ 서울특별시 ⑤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해설

- 지방자치법 제10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 제173조(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 제174조(특례의 인정) ①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대하여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답 ⑤

19 버먼(Berman)은 정책집행을 정형적 집행(programmed implementation)과 적응적 집행(adaptive implementation)으로 구분하였는데, 다음 중 적응적 집행에 비해 정형적 집행의 상대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

2018 소방간부

- ① 정책상황은 비구조화된 상태이다. ② 정책목표의 수정이 필요하다.
 ③ 관련자의 참여필요성이 낮다. ④ 집행자의 재량은 광범위하다.
 ⑤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는 부차적 성격을 지닌다.

해설

버먼(P. Berman)은 정형적 집행과 적응적 집행을 구분하고 개별적인 집행환경에 부합하는 적응적 집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③는 정형적 집행, ①②④⑤는 적응적 집행의 특징.

• 정형적 집행 : 정책상황이 구조화되어(안정적), 설정된 목표를 집행자가 충실히 구현해야 하므로 목표의 수정이나 관련자의 참여 필요성은 낮음. 집행자의 재량권 증가는 목표 달성에 차질을 초래하므로 재량권은 제한함. 정책평가는 1차적으로 집행의 충실도(fidelity)·성과를 측정(수립된 정책목표를 얼마나 충실히 달성했는가 평가의 기능)

정형적 집행과 적응적 집행

구 분	정형적 집행(중앙통제적 전략)(programmed implementation)	적응적 집행(현지적응적 전략)(adaptive implementation)
의 미	비교적 명확한 정책목표에 의거하여 사전에 수립된 집행계획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 집행	비교적 불명확한 정책목표에 의거하여 다수참여자가 협상·타협을 통해 정책을 수정·구체화하며 집행
정책상황	구조화된 상황 : 환경의 안정성이 높음 ① 정책목표·수단을 둘러싼 갈등이 적음 ② 구체적 수단 선택을 위한 이론·기술 확실 ③ 엄격하게 연결된 계층적 구조의 집행기관 ④ 정책이 요구하는 변화의 범위가 좁음	비구조화된 상황 : 환경의 불안정성 ① 정책목표·수단을 둘러싼 갈등이 심함 ② 구체적 수단 선택을 위한 이론·기술 불확실 ③ 느슨하게 연결된 비계층적 구조의 집행기관 ④ 정책이 요구하는 변화의 범위가 넓음
정책목표 수정필요성	정책목표를 둘러싼 갈등이 낮고 수립된 정책목표가 본질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보므로, 정책목표 수정의 필요성이 적음	정책목표를 둘러싼 갈등이 심하고 당사자 간 협상·타협으로 정책이 수정될 수 있으므로, 정책목표 수정의 필요성이 많음
관련자의 참여	성공적 집행은 설정된 목표를 집행자가 충실히 구현하는 것이므로, 관련자의 참여 필요성이 낮음	집행과정에서의 문제해결 제고, 관련자의 동기부여, 능률적 집행을 위해 관련자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
집행자 재량	재량권 제한(재량권 증가는 목표달성에 차질 초래)	광범위한 재량권 필요(현실성정에 맞는 집행이 가능)
평가의 기능	집행의 충실도(fidelity)·성과를 측정, 수립된 정책목표를 얼마나 충실히 달성했는가 평가의 기능	1차적으로 적절한 적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변화에 대한 적응성) 점검하며, 성과의 측정은 2차적임.

답 ③

20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18 소방간부

- ① 엘더퍼(Alderfer)의 ERG이론은 상위욕구 충족이 좌절될 경우 하위욕구가 중요한 동기유발 요소가 된다고 주장한다.
- ②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따르면, 보상은 개인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③ 보수체계는 허츠버그(Herzberg)의 2요인 이론에서 동기요인에 해당한다.
- ④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은 목표의 구체성에 따라 직무성과가 달라진다고 본다.
- ⑤ 매슬로(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서 생리적 욕구와 안전욕구는 ERG이론의 존재욕구와 유사하다.

해설

③ (×) 보수체계는 허츠버그(Herzberg)의 2요인 이론에서 불만(위생)요인에 해당한다.

허츠버그의 2요인 이론 - 불만요인과 만족요인

불만요인(dissatisfier) = 위생요인(hygiene)	만족요인(satisfier) = 동기요인(motiva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만유발 또는 불만해소에 작용 • 생산성 향상과 직접적 관계 없음(필요조건에 불과). • 불만요인 개선시 불만 없는 상태가 됨. • 불만요인 개선시 만족으로 연결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족 또는 직무수행 동기유발에 작용 • 생산성 향상과 직접 관련됨(충분조건). • 만족요인 불충족시 만족 없는 상태가 됨. • 만족요인 불충족시 불만으로 연결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직무수행상황 vs 조직구성원 • 직무 외적이고 물리적·환경적인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 자체 vs 조직구성원 • 직무 내재적·심리적 요인(내적 보상·자아실현)
조직의 정책과 관리·관행·규칙, 감독(리더십의 질), 근무환경·작업조건, 근무시간, 정년, 지위나 직위, 신분안정(직업적 안정), 복지시설, 보수, 대인관계(상사·동료·부하직원과의 인간관계)	직무상 성취감(자아실현)·인정감, 직무자체·직무내용(보람 있는 일), 성장·발전, 직무충실화(job enrichment), 승진, 자아개발, 직무성과, 책임의 증대, 칭찬

답 ③

21 개방형 직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 소방간부

- ① 일반행정이 중심의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다.
- ② 부처중심주의의 폐쇄적인 인력 운영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입되었다.
- ③ 공직 내·외의 공개경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모직위제와 동일하다.
- ④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분보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⑤ 일반직과 특정직에만 적용되고 별정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 ① (×) 해당 직무에 대한 전문능력을 지닌 전문행정가(specialist)를 중시하므로 일반행정가 중심의 직업공무원제 확립이 곤란하다.
 - ② (○) 개방형 임용은 부처중심주의의 폐쇄적 인력 운영(폐쇄형 임용)에서 벗어나 하위직뿐 아니라 중·상위직까지 외부충원을 허용하여 전문관리자를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식이다. 개방형 임용은 유연성을 증진시킨다. 전통적인 폐쇄형 인사제도는 집단구성원을 동질적으로 만들고, 이 과도한 동질성은 집단사고(group think)의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방형 임용제도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인적구성과 사고방식을 좀 더 다양하고 유연하게 함으로써, 중대한 의사결정상의 집단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
 - ③ (×) 개방형은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 임용. 공모직위제는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공무원 중 적격자 임용(외부임용 없음)
 - ④ (△) 일반적으로 개방형 임용은 신분보장을 약화시켜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하며,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기동안 신분보장이 된다. 개방형임용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거나 별정직공무원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 또는 임기제 공무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당연 퇴직된다(단,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총임용기간이 3년 이상이며, 해당 직위에서 성과가 탁월한 경우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 가능).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 제10조 제1~3항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다.
 - ⑤ (×) 공모직위제는 경력직만 대상으로 하지만 개방형 직위는 별정직도 가능하다.
 - ┌ • 개방형직위 지정 비율: ㉠ 고위공무원단: 20% 범위. ㉡ 과장급: 20% 범위
 - └ • 공모직위 지정 비율: ㉠㉡ 고위공무원단: 경력직 30% 범위. ㉢ 과장급: 경력직 20% 범위
- * 정답 여부: ②는 개방형 직위제나 공모직위제의 도입 목적 중 하나이다. ②의 경우 임기제로 임용시 임기동안만 신분보장이 되고 임기 만료 후 신분유지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신분보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표현도 틀리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출제기관측은 답을 ④로 처리했으나 ②는 확실히 옳고 ④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임기 동안은 신분보장, 공직 외부에서 임용된 자는 임기 이후 신분은 보장 안 됨.) ②를 답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답 ②

22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이 아닌 것은?

2018 소방간부

- ① 대외적 권력성을 갖는다.
- ② 관료제적 성격을 지닌다.
- ③ 관리기술적 속성을 지닌다.
- ④ 집단적 협동행위이다.
- ⑤ 개방체제로 운영된다.

해설

- ① (×) 대외적 권력성은 행정의 특징. 행정은 경영에 비해 공공성·공익성, 법정성(法定性), 공개성·평등성, 정치성·통치성, 권력성·강제성, 안정성·계속성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

■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성(합리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추구하는 목표는 다름(공익 vs 사익) ② 관리기술성·기술성(인사·재무·조직관리) : 목표달성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활용 ③ 관료제적 성격 : 전문화·계층제·분업·비정형성(非淸謚性)·규칙중시 등을 특징으로 하며 그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적 특징(형식주의·동조과잉·인간소외·할거주의 등)을 갖는 조직구조. 상대적으로 정부조직이 관료제의 역기능적 특성이 강함. 	↔ 행정관리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집단적 협동행위 : 다수인의 협력체계 ⑤ 합리적 의사결정 : 복수의 대안 중 최적인 선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결정성은 유사점, 정책결정성은 행정의 특징 	↔ 행태주의 (Sim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⑥ 봉사성 : 행정은 국민에게 직접적 봉사, 경영은 소비자에게 간접적 봉사(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서비스·재화 공급이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킴) <input checked="" type="checkbox"/> 봉사대상은 다름(행정은 일반국민, 경영은 소비자), 소비자의 선호가 시장에서 표출되므로 행정보다 경영이 고객범위가 명확하며 고객의 요구 파악이 더 용이함. ⑦ 동기부여 방법 : 경제적 욕구·사회적 욕구·자아실현 욕구 등의 충족을 통한 동기유발. 단, 상대적으로 행정부문에서는 공복으로서의 사명감이 더 작용할 수는 있음. ⑧ 개방체제적 성격 : 외부환경과의 유기적 상호작용 ⑨ 탈관료제적 조직구조와 지식조직의 활용 : 지식정보사회, 후기산업사회에서 관료제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과 경영에서 활용 	

답 ①

23 정책과정의 권력모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18 소방간부

- ① 다원주의론은 권력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분산되어 있다고 본다.
- ② 신엘리트이론은 사회의 지배 엘리트가 허용하는 문제만이 정책의제로 형성된다고 본다.
- ③ 무의사결정은 정책결정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과정에서도 발생한다.
- ④ 다원주의론은 이익집단들 간의 관계를 상호보완적인 상태로 본다.
- ⑤ 다원주의론 시각에서 정부는 갈등적 이익을 조정하는 심판자 역할을 한다.

해설

- ④ (×) 다원주의론은 이익집단들 간의 관계를 상호경쟁적인 상태로 본다. 이익집단 간에 영향력의 차이는 있으나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데 합의를 하고 있으므로 큰 갈등 없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이룬다고 본다.

답 ④

24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 소방간부

- ① 공식적인 정책참여자들 간의 상호 논의가 정책과정과 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되었다.
- ② 정책공동체는 이슈네트워크에 비해 참여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 ③ 이슈네트워크는 이익집단, 행정조직, 의회 위원회가 동맹을 형성하여 정책과정을 안정적으로 지배한다고 본다.

- ④ 정책공동체는 급격한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 ⑤ 하위정부모형은 내부균열과 외부세력의 진입으로 형성된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관계를 강조한다.

해설

- ① (×) 정책네트워크는 정책과정이 다양한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이뤄지는 점에서 착안되었다.
- ③ (×) iron triangle(철의 삼각)에 대한 내용이다.
- ④ (×) 정책공동체는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가능하게 하여 정책결정자 교체에 따른 정책혼란이나 표류 방지하며, 정책 형성·집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나 쟁점을 충분히 인지하므로 정책과정이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급격한 정책변동과는 거리가 멀다.
- ⑤ (×) 하위정부(철의 삼각)에서 형성되는 연계관계는 안정성과 응집성이 아주 높고 하위정부의 자율성 또한 높다고 본다. 하위정부는 서로 독립적이며 다른 집단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정책을 통제한다고 본다.

답 ②

25 매트릭스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소방간부

- ① 기능부서장과 사업부서장이 자원배분권을 공유한다.
- ② 조직 구성원 간의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 기여한다.
- ③ 명령 및 보고체계가 다원화되어 있다.
- ④ 이중구조를 통한 인적자원의 경제적 활용을 도모한다.
- ⑤ 조직의 신축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 기업에서 많이 채택한다.

해설

- ② (×) 기능부문, 사업부문의 두 상관과의 갈등이 불가피하고, 상·하간 부드러운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우며, 다양한 인간관계 기술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고 권력균형을 유지하는데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답 ②